

■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

장인성

## 1. 머리말 : 새로운 보수주의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은 정치군사적 대립구도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국제관계의 존재양식과 국가의 행동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나 사회의 개방에 대응하는 보수와 진보의 감각도 달라지고 있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는 가치지향이나 행동양식을 달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대체로 보수는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진보는 이를 비판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구체적 양상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도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 들면서 보수 대 진보의 오랜 이원구도가 붕괴되었고 이에 따라 보수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진보의 입지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이미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은 ‘국제화’를 표방하면서 ‘국제책임’을 수행하는 ‘국제국가’로서 일본국가를 상징하는 한편, 이러한 일본국가를 내부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보수의 일상화를 추동한 바 있다. 각종 국민회의의 조직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의 법제화 추진, 교육기본법 제정 등 흔히 ‘보수화’, ‘우경화’로 불리는 ‘국민화’가 그것이다. 국민화는 보수-진보의 이원구도

---

\* **지은이 | 장인성**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도쿄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국제관계론 전공에서 유학적 사유의 관점에서 근대적 사유를 포착하는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정치사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요코이 쇼난(横井小楠)과 김윤식의 국제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한 개항기 한일 정치사상 비교 연구로 학술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국제사회론, 일본사상사,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개념사 등이다. 주요 저서로 『장소의 국제정치사상』(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근대한국의 국제관념에 나타난 도덕과 권력』(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메이지유신』(살림, 2007) 등이 있다.

\*\* 이 연구는 2007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른바 ‘보혁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1990년대의 ‘보수개혁’은 보수-진보 이원구도의 붕괴 위에 전개되었다. 보혁구도의 붕괴는 좌파/진보의 몰락을 의미할 뿐 아니라 보수의 새로운 전개를 가져왔다. 보수정치가들의 경우 자민당 보수집권(55년체제)이 보수 연립정권으로 바뀌는 정치변동 속에서 ‘보수개혁’을 모색해 왔다. 걸프전쟁 지원을 둘러싸고 일본의 ‘국제공헌’의 한계가 드러나고 탈냉전기 국제안보에 대응하는 일본국가의 무력함이 드러나면서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등 보수정치가들은 국가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거나 행정개혁을 실천하였다. 평화헌법 개정과 국가개혁을 통해 탈냉전기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역할의 확대를 지향한 ‘보수개혁’이었다.

그런데 보수지식인들의 경우 보수의 새로운 전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상황이 보수의 존재양태에 변화를 초래한 것은 진보의 몰락 못지않게 의미가 깊다. 보수정치가들이 세계에 대한 ‘공간적 대응’을 통해 세계 속의 일본국가의 존재양상을 문제삼는다면, 보수지식인들은 ‘시간적 대응’을 통해 일본국가와 사회의 존재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에 무게를 둔다. 보수정치가들의 정치적 현실주의는 현실의 국제체제와 미일동맹을 전제로 한 현재의 국제 맥락에서 일본국가가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할지를 따진다. 이에 비해 보수지식인들(보수주의자들)은 현실을 용인하는 정치적 사려(prudence)로 귀결되기 쉬운 정치적 선택에 불만을 표하면서, 전후체제와 일본국가의 존재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탈냉전과 지구화 맥락의 일본 보수주의는 전후체제의 정치적 존재방식뿐 아니라 전후체제의 이념적 존재방식까지 문제삼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국제화’, ‘국제국가’, ‘정치대국’ 등의 슬로건보다 일본 국가공동체의 역사적 존재방식과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중시한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견해와 활동은 표층에 불거져 나온 보수주의의 극단적 표현일 따름이다.

그런데 보수-진보는 각각 정치감각과 일상감각의 차원을 갖는다. 정치가나 행동가들의 보수는 사회영역에서 영위되는 일상감각과도 일정한 연관을 갖지만 주

로 정치영역에서 정치감각으로서 표출된다. 탈냉전기 일본 보수주의의 성격과 특질은 '일상감각'과 '국가 표상'의 두 지표를 매개로 포착될 수 있다. 일상감각으로서의 보수는 정치감각으로서의 보수와 선을 긋기 어렵지만, 정치행위를 배제한, 혹은 정치행위로 표출되기 전의 보수감각과 보수이념으로 상정한다. 이 논고에서는 보수의 일상감각을 양성해 온 전후체제를 문제삼아 보수의 일상감각을 보수주의 이념으로 재구축하려는 보수지식인의 담론에 주목한다. '역사교과서 문제'라는 정치적 행위에 가려진, 혹은 정치적 비난에 얽매된 보수주의의 일상감각과 보수이념을 '국가'라는 표상을 매개로 성찰할 때 일본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일본-보수' 표상의 실체는 얼마간 드러날 것이다.<sup>1)</sup>

## 2. 보수의 시작

### 1) 보수의 시작

보수는 진보를 짝으로 삼아 성립한다. '55년체제'(자민당 장기집권) 하에서 보혁구도는 불균형 상태였지만 자민당-사회당의 대립구도 위에서 성립하였다. 자민당 보수정권은 '보수'뿐 아니라 좌파에 대항하는 '보수혁신'을 내포한 체제였다. 냉전 종식은 '55년체제'뿐 아니라 보혁구도의 붕괴를 가져왔는데, 보혁구도의 종언은 정치학자 미쿠리야 다카시(御廚貴)의 말을 빌리면 '보수의 종언'이기도 했다. 즉 혁신의 붕괴는 '보수의 종언'을 뜻했다.<sup>2)</sup>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미국에게 '역사의 종언'이었다면 일본에게는 '보수의 종언'이었다. 물론 '보수의 종언'은 대립항의 소멸

1) 일본 보수주의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정치가, 보수비평가, 보수학자, 보수논객 등 다양하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보수주의에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논쟁의 핵을 이루었고 '일본=보수'의 극단적 표상을 드러냈다. 본고에서 다루는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새역모'에 참여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본고에서는 '새역모'의 운동이나 이념을 직접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새역모'는 1990년대 이후의 보수주의 현상의 하나의 산물이지만, 보수주의 자체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배제한 현대 일본 보수주의의 심리와 논리를 분석한다.

2) 御廚貴, 『保守の終わり』, 東京: 毎日新聞社, 2004, 78~79쪽.

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보수현상이나 보수적 행위가 종언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후속 연립정권들도 보수나 보수개혁을 지향하였다.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의 복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개혁을 모색했고 국가개혁을 제기했다. 보수 내부에 개혁-저항 구도가 두드러지고 '보수혁신'이 힘을 얻었던 것이다. 이는 '보수'가 '55년체제' 붕괴에 따른 보혁구도의 소멸로 '혁신'이란 적을 상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존재를 구축해야 하는 숙명에서 비롯되지만, 침투해 오는 지구화에 대면해야 하는 일본 국가와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

그런데 탈냉전과 맞물려 정치제도로서의 '55년체제'는 공식적 종언을 맞이했지만, 의식으로서의 비공식적 '전후체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정치감각이 아닌 일상감각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보수가 출현했다고 하겠다. 보수주의자들의 일상감각에서는 '보수의 종언'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의 시작'일 수 있다. '보수의 시작'은 '역사의 시작'과 관련된다. 일본에게 냉전의 종언은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이었다. '역사의 시작'은 동아시아 맥락에서는 냉전기에 억압되었던 '역사'의 재발견, 즉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을 둘러싼 기억과 책임의 부활을 뜻한다.

보수지식인들에게 '보수의 시작'은 이러한 '역사의 시작'에 대응하는 한편, 일본의 전후체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총체적 비판의 개시를 의미한다. '역사의 시작'은 보수주의 발언을 본격화하는 '보수의 시작'인 셈이다. '보수의 시작'은 정치적 보수세력/정치적 현실주의자와 구별되는, 오히려 정치적 보수세력의 '현실주의'를 상황추종적인 비주체적 정치행위로 간주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이들에 대항하는 새로운 보수주의, 이른바 '진정한 보수주의'를 구축하려는 의식의 출현을 가리킨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은 보수주의자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투쟁감각을 일깨웠다. 탈냉전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문제', '중군위안부 문제', '전쟁책임 문제' 등의 문제군이 분출하여 보수-진보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보수의 시작'-'보수의 재발견'을 부추겼다.<sup>3)</sup> 전후 보수체제에서 확립된 보수적 태도 혹은 보수의 일상감각은 보다 정밀한 보수주의 이념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2) 보수주의와 일본

‘보수의 시작’은 멀리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에까지 닿아 있다. 현대 일본의 보수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지적 기원을 버크에서 찾는다. 보수주의는 19세기에는 혁명-보수(반혁명) 구도에서, 20세기에는 진보-보수 구도에서 성립했다.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을 기원으로 삼는 근대 보수주의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와 프랑스혁명의 쌍생이었다. 자유주의가 프랑스혁명의 특정 이념과 추상적 관념을 준거로 삼아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반면, 보수주의는 이념보다는 과거와의 연속과 현상(現狀)에 토대를 둔 점진적 변화를 모색한다.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추상적·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현실의 질서나 종교와 같은 정신적 권위 속에서 보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간의 이성에서 자유나 진보를 찾는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에 반대하면서 전통과 현실에서 가치를 찾는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합리주의를 싫어하기는 해도 반합리주의는 아니다. 보수주의는 이성 뿐 아니라 감정, 본능, 의지도 중시한다. 삶의 다원성을 전제하며 능력의 조화 내지 균형 역시 중시한다. 또한 자유와 진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본성과 인간능력의 한계를 인식하며, 현명한 판단과 사려있는 행동, 조화와 균형 감각을 요구한다.<sup>4)</sup>

그런데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자유주의가 변용하고 사회주의가 출현하면서 보수주의는 변형한다. 자유주의는 실증적 과학성을 받아들이면서 추상성, 관념성이 약해졌고, 구체적인 삶에 기초한 자유를 중시하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 정당이 성장하면서 현대 자유주의는 혁명보다는 개혁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성격을 띠

3) 90년대 후반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 -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간 논쟁은 탈냉전이 전쟁책임에 관한 기억과 방법을 되살렸음을 보여 준다. 일본의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아시아에 사죄하기에 앞서 자국민(일본인)의 애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토)와, 피해자인 아시아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아시아 국가에 사죄해야 한다는 논리(다카하시) 간의 쟁투였다. 일견 보수 - 진보 논쟁의 성격을 띠지만, 다카하시가 진보의 견해를 전형적으로 보인 반면, 가토의 주장은 반드시 보수라고 하기 어려운, 굳이 말하자면 리버럴 보수의 성격이 강하다. 더 주시할 것은 가토의 견해가 국가와 아시아의 사이에서, ‘애도’와 ‘사죄’의 사이에서 논리적 고민을 해야 했고, 다카하시가 아시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본이라는 응답 주체의 자기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맥락이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4) 林健太郎, 「現代における保守と自由と進歩」, 林健太郎 編, 『新保守主義』, 東京: 筑摩書房, 1963, 10-22쪽.

있고, 보수주의 정치세력에 거의 흡수되면서 자유주의 정당=보수 정당이란 등식이 성립했다. 보수주의도 사회주의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게 된다. 보수 정당은 '자유',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사회주의 정당에 대항하는 부르주아 정당을 대변하게 된다. 사회주의 정당과 대항하고자 복지국가 정책을 받아들여 신보수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보수주의가 수구의 이념이나 권력형 부패의 온상으로 간주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려는 의도도 있었다.<sup>5)</sup>

보수주의는 진보를 규정하는 이념과 운동에 대응한다. 19세기에는 자유주의가, 20세기에는 사회주의가 진보를 규정했고, 보수주의는 이들 각각에 대응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구도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작동했을까. 일본의 보수주의는 근대 일본, 제국일본, 전후 일본, 탈냉전/지구화의 각 맥락에서 표출되었다. 보수주의는 각 맥락의 '국제상황' 하에서 '국가'(공동체)의 생존·자립·발전을 모색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문화(전통·가치·역사)가 공동체 방위의 수단으로서 선택되는 구도에서 표명된다. '국제상황'을 전제로 하는 한, 보수주의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관계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국가'(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수준과 사회결집력도 보수주의의 수동성과 능동성을 얼마간 규정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각 맥락에서 진보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에 대항하면서 '보수'를 얘기한다. 이때 버크의 보수주의는 유력한 준거였다.

메이지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대결하면서, 또한 메이지정부가 문명개화와 더불어 국민국가 형성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보수 프로그램을 추동하면서 형성되었다. 메이지 정치가들은 독일 모델에 기초한 입헌군주제(천황제)와 관료제를 확립했고 국채이념과 가족국가관(호즈미 야스카穗積八東)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관료 보수주의로 기능했다. 천황제국가 성립과정에서 자유주의에 대항해 유교를 국가의 도덕규범으로 상징하려는 유교 보수주의(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니시무

5) 林健太郎, 「現代における保守と自由と進歩」, 7~10쪽.

라 시게키(西村茂樹)도 나타났다. 국가에 봉사하는 기독교 보수주의도 출현했다. 특히 '신세대' 지식인들이 메이지정부의 문명개화에 대해 전통 가치에 기초한, 일본의 '국체', '국수'(nationality)를 보수하려는 '국민주의'(구가 가쓰난陸羯南), '일본주의'(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도 근대 내셔널리즘과 결합한 보수주의 성격을 띠었다.<sup>6)</sup>

메이지 시기에 버크의 보수주의는 헌법제정과 반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받아들여졌다. 버크는 1870년대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지만,<sup>7)</sup> 본격적 수용은 1881년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가 『정치론략』(政治論略)을 발간하면서였다. 『정치론략』은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의 초역이지만, 가네코가 논지를 살리기 위해 버크의 다른 글도 원용하고 루소(J.-J. Rousseau)와 페인(Thomas Paine)에 대한 비판적인 소개도 곁들인 일종의 편역서였다. 『정치론략』은 민권운동이 고조되고 메이지정부의 국가구상과 준거이론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권에 대항하는 국시를 모색한 원로원의 요망에 부응해서 번역된 것으로서 관료들 사이에 보수주의의 이론적 무기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정치론략』은 반대로 자유주의 민권론의 이론적 심화를 자극하기도 했다.<sup>8)</sup> 하지만 버크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게 맞는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가네코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비서로 메이지헌법 기초에도 관여했지만, 실질적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버크의 보수주의는 절대왕권제를 비판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었고, 메이지헌법이 독일법을 모델로 삼는 천황제국가를 구축하면서 법학교육에서 영국 헌법학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입지를 잃었다.<sup>9)</sup>

6) 메이지 보수주의에 관해서는 Kenneth B. Pyle, "Meiji Conservatism," John W. Hall ed.,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674~720 ; Kenneth B Pyle, *The New Generation in Meiji Japan : Problems of Cultural Identity, 1885-1895*,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7) 1875년 12월 8일자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에 「영국 버크의 대외책을 인용해 조선문책을 논하다」라는 기사가, 1880년 4월 다카하시 다쓰로(高橋達郎)의 『태서제대기논설』(泰西諸大家論說) 第1集(弘令社)에 「영국 에드먼드 버크의 영국 헌법의 이론」이 소개되어 있다. 高瀬暢彦 編, 『金子堅太郎 『政治論略』 研究』, 東京 : 日本大学精神文化研究所, 2000.

8) 高瀬暢彦 編, 『金子堅太郎 『政治論略』 研究』 제3장, 제4장 참조. 자유민권론자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은 자유주의 사상을 고취하고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한문으로 평역한 『민약역해』(民約譯解, 1882)를 출판했는데, 이 책은 『정치론략』에 자극받아 저술되었다.

9) 水田洋, 『イギリス保守主義の意義』, 水田洋責任 編集, 『パーク マルサス』, 東京 : 中央公論社, 1969, 37쪽.



그렇지만 버크가 완전히 잊혀진 것은 아니다. 1920년대, 30년대 초반 일본은 자유주의(다이쇼 데모크러시)와 사회주의(마르크시즘)가 사회의 진보와 혁명을 구가했고, 초국가주의자나 국가사회주의들이 영미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여 국가의 '개조' '혁신'을 주장하는 분위기였다. 국제론자들은 이러한 진보 혹은 혁신의 움직임에 반발하여 '국체'와 '전통'을 앞세웠고, 버크를 동원하기도 했다. 황국론자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는 혁신세력에 대항하여 반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버크를 동원하였다.<sup>10)</sup> 일본 최초로 버크 연구서를 저술한 우에다 마타지(上田又次)도 "현대세계가 프랑스혁명의 사상으로 덧칠되어 무너지고 역사와 전통이 부정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본도 메이지유신 이후 수입된 프랑스혁명의 사상 하에 모든 전통이 부정되어 도도하게 갈 곳을 모르고, 모든 것이 반역사적으로, 전통파괴적으로 전개되는 금일"의 상황, 즉 "전통에 대한 반역인 반역사성으로서 일관되는 금일"의 상황에서 "올바른 전통과 올바른 역사주의"를 모색하기 위해 버크를 끌어들이었다. 그는 버크의 프랑스혁명 비판이 불철저했다면서 프랑스혁명에 대한 철저한 비판은 "불멸의 국체를 호지하는 일본인만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폈다.<sup>11)</sup>

근대 일본의 보수주의가 천황제국가 형성과정에서 진보주의(자유주의, 사회주의)와 대결하면서 표출된 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자유와 권리를 둘러싼 개인 대 국가의 대결구도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이념이 성립했다는 것과, 국가형성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보수주의의 성격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진보성에 대항하면서도 천황제국가 형성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셔널리즘을 동반했다. 보수주의는 시작부터 국가 표상과 밀접히 상관된 셈이다. '국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하는 변혁과 발전을 추동하였고, 보수적 사고와 태도는 '국가'에 수렴되었다. 국가발전=제국확장은 보수와 혁신을 결합시키

10) 平泉澄, 『革命とパーク』, 『武士道の復活』, 東京: 至文堂, 1933.

11) 上田又次, 『エドモンドパーク研究』, 東京: 至文堂, 1937, 6~7쪽.

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대일본제국'은 대내적으로 보수주의, 대외적으로는 수정주의(현상변경)라는 양면성을 보였던 것이다. 전후체제는 대외적 혁신의 측면을 상실하면서 대내적 차원에서 보수와 혁신이 결합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 3. 제도·감각·표상

#### 1) '보수의 감각'과 제도

일본의 보수지식인들의 삶과 사유를 누르는 하중은 이른바 '전후체제'다. 보수주의자들의 '전후체제' 이미지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제도만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구축한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구성된다. 현대 보수주의는 정책, 교의, 철학의 세 측면에서 영위되지만,<sup>12)</sup> 보수의 철학적·이론적 전통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보수주의는 '행위로서의 보수'(보수적 태도), '원리로서의 보수'(보수이념), '감각으로서의 보수'(보수감각)의 세 측면에서 포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특히 '보수의 감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의 '감각'은 '원리'와 '행위'를 배태하는 심정이기도 하지만, 전후체제의 하중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는 우선은 '보수의 감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후 일본의 대표적 보수지식인이었던 평론가 에토 준(江藤淳)이 “'감각'이 아니라 성문헌법의 이념, '개혁'이라는 이념 위에 입국한” 미국에 이질감을 느꼈을 때, '감각'이 진보에 대항하는 보수주의의 중요한 근거임을 알 수 있다. '감각'은 현실을 파악하는 감성·의식·성향이며 이념과 행동의 무의식적 기반이라 하겠다. 보수감각이 반드시 보수주의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주의는 흔히 보수감각을 내포한다. 이는 전후 보수주의의 선구자였던 평론가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恒存)가 “내 삶의 방식 내지 사고방식의 근본은 보수적이지만 자신을 보수주의자라 생각지는 않

12) 添谷育志, 『現代保守思想の振幅』, 東京: 新評論, 1995, 21~51쪽.

는다. 혁신파가 개혁주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보수파는 보수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sup>13)</sup>고 말한 데서 읽어 낼 수 있다.

‘보수의 감각’은 태생적 소여물일 수도, 진보주의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심정일 수도 있지만, ‘전후체제’라는 체제(제도)와도 깊이 연관된다. ‘보수의 감각’은 전후체제의 허구성과 뒤틀림을 감지해 내는 감각 혹은 능력이라 하겠다. 에토 준은 대미의존적 동맹체제에서 배태된 ‘둔감함’의 멘털리티에 통탄한다. 전후체제의 대미의존성 때문에 “미국 안색만 살피면 우선은 안심된다는 멘털리티”, “미국이 말하는 것만 듣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는 안이한 태도”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란 “국제사회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분투해야 하는” 존재인데, 전후 일본인들은, 메이지 초기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이 “한 순간도 노력을 게을리하면 나라는 망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통감했던 것과 달리,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너무 둔감해졌다고 개탄한다.<sup>14)</sup> 감각이 체제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에토의 ‘보수감각’이 ‘전후체제’를 문제시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일상감각으로서의 보수’가 ‘정치감각으로서의 보수’로 연결될 개연성이 암시되어 있다. ‘보수의 일상감각’이나 ‘심정’을 규율하는 제도는 국제체제(냉전체제, 탈냉전체제)나 국내체제(보수체제, 보혁정당체제) 같은 정치체제, 관료제와 천황제에 기초한 ‘일본시스템’(K. Wolfereen) 등을 포괄한다. ‘야스쿠니신사’, 기념일, ‘히노마루’ 같은 상징들, ‘전쟁유족회’, ‘새역모’ 같은 보수단체, ‘자민당’도 보수감각을 규율하는 제도다. 보수 담론을 유포하는 매스미디어와 출판물도 빼놓을 수 없다. 다만 보수지식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보수의 일상감각’을 ‘보수의 정치감각’으로 정치화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의 상징과 제도와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보수지식인들이 행하는 정치적 행위다. 하지만 ‘전후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론은 이들 정치적 행위에 앞선다.

13) 福田恒存, 『常識に還れ』; 西部邁, 『幻想の保守へ』, 東京: 文藝春秋, 1985에서 재인용.

14) 江藤淳, 『保守とはなにか』, 東京: 文藝春秋, 1996.

## 2) 표상과 '국가'

보수의 감각과 의식은 현실을 보수적으로 보는 방식인데, 현실을 보는 방식에는 표상이 개재된다. 표상(representation)이란 재현(description)하는 행위나 과정, 또는 재현된 것의 상태나 사실을 뜻한다. 표상은 실재의 형상화 혹은 재현된 형상을 가리킨다. 재현과정에는 상상력(imagination)이 관여하며 재현된 표상은 상상의(imaginary) 세계이지만, 표상이 실재(reality)에 근거하는 한 허구일 수만은 없다.<sup>15)</sup> 표상은 현실을 재구성(구속)하기도 한다. 표상은 재생산을 통해 현실을 구성한다. 학습과 사회화를 통해 전승되는 관습적 표상이나 권력에 의한 강제적 표상은 사람들의 감각과 의식을 규율한다. 요컨대 '표상'의 운동(표상작용)에는 재현작용(표상화)과 구현작용(구현화)의 두 측면이 있다. 재현작용은 구현작용을 의도하고, 구현작용은 재현작용을 유도한다. 실재가 재현되고 재현된 표상이 구현되는 장소(topos)는 동일하다.

지식인, 문화인, 학자들은 해석, 재현, 구현을 통해 두 표상의 두 작용에 관여한다. 널리 양해되고 공유된 표상(재현된 형상)은 작자의 이해와 해석을 구속하고, 작자는 공유된 표상을 전제로 재현하곤 한다. 공유된 표상과 이해되는 표상 간에는 편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편차야말로 작자의 의도를 드러낼, 작자가 재현을 행하는 근거다. 예술가나 작가들은 현실(실재)을 어떻게 재현할지를 고민하고 인문학자들은 작자의 재현방식을 해석한다. 사회과학자라면 표상이 현실을 규율하거나 표상을 현실에 구현(재재현=현전화現前化)하는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자들도 보수표상의 재현작용과 구현작용을 통해 가치 있는 영원한 뭔가를 지키려 한다. 보수표상은 문화적 원리에 기초한 표상과 정치적 원리에 기초한 표상 간의 상관성 속에서 생성, 운용된다. 문화적 표상이 국제, 천황

---

15) 상상과 표상, 제도와 표상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Cornelius Castoriadis, *The Imaginary Institution of Society*, tr. by Kathleen Blamey, Cambridge : Polity, 1987를 볼 것.

제, 일본문화, 역사관, 가치체계 등 가치요소들과 관련된다면, 정치적 표상은 국제 체제(냉전, 탈냉전), 미일안보동맹, 평화헌법 등과 같은 체제요소들과 관련된다. 두 표상이 정합적이면 보수표상은 현실적인 것이고, 비정합적이면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보수론자들의 '붕괴감' '위기' '불안'은 문화적 표상과 정치적 표상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괴리를 없애려는 보수주의자들의 시선은 불신의 대상인 정치적 표상을 겨냥한다. 제도와 체제의 '허구성'을 추궁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두 표상 사이의 괴리를 없애는 강력한 표상이다. '국가' 표상은 정치적 표상의 허구성을 추궁할 정치적 준거이자 문화적 표상이다. 보수의 표상은 국토, 자연, 민족, 공동체와 같은 삶(안보)의 공간일 수도, 삶의 가치를 규정하는 천황제, 애국심, 내셔널리즘일 수도 있다. 보수의 가치들은 편견과 이성, 권위와 권력, 자유와 평등, 재산과 생명, 종교와 도덕 등의 항목에서 표출되는데,<sup>16)</sup> 전통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보수할 가장 중요한 표상으로 간주된다. '국가'의 표상작용에는 흔히 '애국심'과 '내셔널리즘' 등이 매개한다. 여기에는 '전후체제' 표상의 해체, '국가' 표상의 재구축(재현작용), '국가' 표상의 실천(구현작용)이라는 정치화의 수순이 따른다. 보수지식인들의 세력화(세력모), 수정주의적 역사서술, 교과서 운동,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의 고양 등은 그 극단적인 보수의 정치적인 행위다.

#### 4. 전후체제

##### 1) '전후체제'

'전후체제'는 전후 일본/현대 일본의 국가와 보수의 존재양식을 재편하는 제도였다. '전후체제'는 평화헌법과 미일안보동맹이라는 제도가 일본의 정치와 사회를 규

16) 로버트 니스벳, 강정인 옮김, 『보수주의』, 서울: 이후, 2007.

을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평화헌법은 이상주의적인 ‘평화애호’의 국가상을 만들어 냈고, 미일동맹은 미국에 순응하는 수동국가(reactive state)라는 성격을 일본에 부여하였다. 평화주의와 발전주의는 이들 제도 속에서 온존했고, 전후체제의 속성을 규정하였다. 헌법과 동맹은 전전의 강력한 국가 표상을 탈색시키는 촉매였다. 국제론과 군국주의가 만들어 낸 국가표상을 추락시켰고 국가의식을 현저히 약화시킨 계기는 패전과 점령군의 민주화개혁이었다. ‘전후체제’는 보수 정당(자민당)과 진보정당(사회당)의 불균형 보혁구도 위에서 성립한 자민당 주도의 보수정치체제인 ‘55년체제’를 축으로 전개되었다. 55년체제는 보수정권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주의에 의해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다.

전전과 전중의 일본에서 국가와 이념이 강력히 결합하였다면, 전후 일본에서는 분리되어 있었다. 공식적 제도와 정치체제가 보수적/현실주의적 성격을 띤 반면, 비공식적인 지식사회/이념세계는 진보가 압도했다. 보수정치가·관료들이 국제체제와 미일동맹에 순응하는 현실적인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다면, 진보세력은 국제체제와 미일동맹을 초월한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었다.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수사적 언어와 이상주의적 인류애를 과시하는 정치적 언어가 거리를 둔 채 공존하면서 길항적 국가관·국가관의 비대칭적 공존을 함축하는 이념적 구성물이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전후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이념이다. 보수지식인들은 ‘평화’·‘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지만, 절대평화에 입각한 평화국가나 개인주의적 시민사회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보지식인들의 이상주의적 평화국가론이나 냉전체제의 맥락을 경시하는 전면강화론이나 중립론을 비판해 왔다. 후쿠다 쓰네아리는 진보주의자들이 “모든 현상과 문제를 자기라는 주체로부터 잘라내고 멀리하는” ‘자기말살병’에 빠졌으며, 절대평화론은 근거가 취약한 ‘두 개의 세계의 평화공존’에 대한 신념, 평화 대 전쟁의 이분법적 사고, 소련이 ‘평화공존’을 보전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다고 비판한다.<sup>17)</sup> 진보주의자들의 ‘평화’ ‘민주주의’ 관념의 비현실성·허구성·추상성에 대항하여 일상세계의 삶과 상식을 토대로 주체를 모색하는 심리가 드러난다. 후쿠다는 진보주의자들의 ‘반미’ ‘중립’ 주장을 비판하면서 국익을 위한다면 ‘강대국’ 미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였다.<sup>18)</sup> 이 자세에서는 냉전체제와 미일관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실적 국제정책을 모색한 정치적 현실주의자(고사카 마사타카高坂正堯, 나가이 요노스케永井陽之助)와의 친근성이 읽혀진다. 그렇지만 진보주의자들의 ‘평화’와 ‘민주주의’ 관념을 지탱하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보수지식인들에게 ‘국익’과 ‘이념’, ‘친미’와 ‘반미’, ‘진보’와 ‘보수’는 착종되어 있다.

일본의 전후체제에서 ‘국가’는 ‘평화국가’, ‘문화국가’의 용례처럼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신하는 연성적인 관형사를 동반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자유주의적 이념의 표현이자 동시에 기존 ‘국가’ 관념의 강성 이미지를 완화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용법이다. ‘평화’, ‘문화’는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정치가들 사이에 ‘국가’를 수식하거나 호도하는 핵심 정치언어로서 기능했지만, 용법과 의도는 달랐다. 추상적 국가관과 실제적 국가관의 차이와 연관된다. 간혹 천황제에 기초한 문화공동체 국가관을 상징하는 극우적/심미적 이념과 행동이 표출되긴 했지만, 대체로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를 규율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카소네 정권 때 극명히 드러났듯이 ‘평화’와 ‘경제발전’은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부추겼고, ‘경제대국’을 토대로 한 ‘국제국가’의 출현은 ‘전후정치의 총결산’, 즉 전후체제의 종언을 주장하는 보수심리를 산출하였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은 ‘전후체제’를 흔들었고 ‘국가’를 쟁점화시켰다. 먼저, 냉전체제에서 잠복해 있던 전쟁책임 논쟁과 중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

17) 福田恒存, 『平和論にたいする疑問』(1954), 福田恒存, 『日本を思ふ』, 東京: 文藝春秋, 1995, 181~204쪽.

18) 福田恒存, 『平和論にたいする疑問』, 181~204쪽.

주체로서의 '국가'가 부상한다. '자유주의 사관'을 내건 '새역모'의 역사 재서술 혹은 왜곡은 '국가'의 주체적 존재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sup>19)</sup> 걸프전쟁은 '국제공헌'이란 화두를 통해 '국가'의 존재방식을 일깨웠다. 일본 국내에서도 보혁구도의 붕괴와, '국제공헌'과 연계된 '헌법개정'의 쟁점화는 '개혁'이란 새로운 언어 상징을 등장시켰다. 55년체제가 붕괴하고 뒤이어 연립정권이 출현하면서 '개혁'은 보수의 생존을 위한 정치언어로서 기능하게 된다. 탈냉전의 시간(역사)적 맥락이 책임주체와 국제행위자로서의 '국가'를 쟁점화하고, 지구화의 공간(세계)적 맥락이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쟁점화했다. '국가'의 쟁점화를 통해 '전후체제'의 존재방식을 자각하는 문제상황이 출현했다. '전후체제'는 이런 쟁점화 과정을 거치면서 타자화되었고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제적 계기에서 촉발된 일본 '국가'의 존재방식을 둘러싼 보수-진보 논쟁은 일본에서의 '냉전의 종언'이 '전후의 종식'이 아닌 '진정한 전후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냉전의 종언은 '전후체제'를 끝낸 것이 아니라 '전후체제' 속에서 잠재했던 문제들을 현재화(顯在化)하는 계기였다.

## 2) '허구로서의 전후체제'

1956년 경제회복을 이룩한 일본정부는 『경제백서』를 통해 경제적 차원의 '전후' 종언을 선언하였고, 1980년대 나카소네 수상은 정치적 차원의 '전후' 종식을 의미하는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담론의 세계에서 '전후'는 존속해 왔다. 비무장과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이 존속하는 한, '평화헌법'이 미국의 강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신념이 견지

19) 1980년대 이후 역사교과서 논쟁은 두 맥락을 갖는다. 먼저 80년대 초 침략전쟁의 표현과 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역사 교과서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문제로서 성립하였다. 교과서 문제는 동아시아 국제 수준의 쟁점이었고, 국내 논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새역모의 '자유주의 사관'과 역사교과서 발간은 일본 국내의 보수-진보 논쟁과 교과서 채택 찬반 운동을 불러일으켰고 국제 쟁점으로 이어졌다. 두 맥락에 보이는 변화는 탈냉전을 계기로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보수-진보 논쟁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되는 한, 그리고 미일안보동맹을 주권제한으로 여기는 반미감정이 살아 있는 한, '전후체제'는 존속하기 마련이다. '전후체제'는 평화헌법과 미일안보동맹으로 성립한 제도적 구성물일 뿐 아니라 이들 제도 속에서 생성된 견해나 의식을 포함한다. '전후체제'는 사실의 구성물일 뿐 아니라 언설 공간이며, 제도인 동시에 가치체계다. 탈냉전과 지구화 맥락의 보수주의자들은 제도와 가치의 양면에서의 허구성을 폭로함으로써 '전후체제'의 전복과 진보주의의 몰락을 꾀한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전후체제'는 허구적 세계다. 보수정치학자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는 전후체제가 평화헌법의 '커다란 거짓' 위에 성립했다고 본다. 군사력 보유금지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제9조는 '완전한 거짓말'이며, 이러한 평화헌법 위에 성립한 전후 민주주의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굳히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전후 60년'은 '일본문명의 생명력'이 쇠락해 온, '문명사적 위기의 60년'이었다고 진단한다. '문명사적 위기'는 안전보장, 국민정신, 황실의 존재방식의 위기를 가리킨다.<sup>20)</sup> 보수주의 경제사상사가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는 '전후체제'를 경제주의(근대화), 민주주의, 평화주의와 같은 이념들이 만들어 낸 '허구적 세계'로 규정한다. '전후체제'는 진보파든 혁신파든 "정신적 공백에 대한 자각이 없는" 체제라는 말이다. '정신적 공백'은 '국가의식(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상실'을 뜻한다. 사에키는 전후 일본의 '인권·평등·친절' 교육,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가 허구적 현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허구성은 현실(reality)과 가상세계(virtual reality) 사이의 간극을 뜻한다.<sup>21)</sup> 사에키는 '전후체제=근대주의=진보주의=합리주의'라는 관점에서 국가의식과 국가를 포착하고, 전후체제를 "기묘하게 뒤틀린 국익과 이념의 유희"를 내장한 '허구적 세계'로 규정한다. 새역모에 관여했던 정치사상사가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의 경우 '전후체제'는 평화헌법이 만

20) 中西輝政, 『日本文明の興廢』, 東京: PHP研究所, 2006, 1~15쪽.

21) 佐伯啓思, 『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グローバリズムと国家意識』, 東京: 講談社, 1998, 11쪽.

들어 낸, 현실과 유리된 전후 평화주의에 빠진, 사회계약론적 발상에 빠져 ‘국가로 부터의 자유’만을 연구하는, ‘국가’ 없는, ‘허구’·‘허위’로 가득한, ‘자폐적 사고공간’이다.<sup>22)</sup> 새역모 대표를 지낸 니시오 간지(西尾幹二)의 표현을 빌리면, ‘전후체제’는 ‘말’과 ‘체험’이 분열된 세계다. “말에 지배되어 말은 잘 하지만 말을 상실한 사람”= ‘성격 장애자’들이 ‘직관’과 ‘말’이 괴리되고 ‘체험’과 ‘표현’이 격리된 상태에서 ‘언어의 환상적 비대화’만을 일삼는, 신체를 통한 경험, 즉 ‘체험’이 결여된 체제다.<sup>23)</sup>

‘거짓말’, ‘허구적 세계’, ‘자폐적 사고공간’, ‘성격장애자’ 등의 말에서 간파되듯이 보수주의자들의 눈에 ‘전후체제’는 병리적 사회로 비친다. 병리학적 진단은 현실과 비전 사이의 간극 혹은 괴리를 추궁한 것이지만, 관찰자의 불안감이 투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불안감은 일본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감각과 결부된다. 이미 1970년에 에토 준은 일본사회의 병리적 속성을 가구(假構)와 현실이 겹쳐진 ‘놀이의 세계’로 읽어 낸 바 있다. ‘전후체제’는 반미감정이 강하면서도 미국에 의존하는, ‘자주방위’를 얘기하지만 일본인의 ‘자주적인’ 방위일 수 없는, 자기동일성(아이덴티티) 회복과 생존 유지가 이율배반적으로 공존하는 ‘놀이의 세계’로 그려졌던 것이다.<sup>24)</sup> 이후 에토는 전후 일본의 원점을 이루는 행복이 무조건적이지 않았음을 논증함으로써 ‘놀이의 세계’에서 주체를 찾으려 했다.<sup>25)</sup> 1980년대에 들어서는 점령기 일본이 미국의 언론 ‘검열’로 ‘닫혀진 언어공간’이었고,<sup>26)</sup>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가 일본헌법을 제정한 미국에 의해 구속받아 왔다는 주장을 펴다.<sup>27)</sup> 후쿠다 쓰네아리의 경우 진보주의자들의 비현실성·허구성·비주체성을 비판했던 것이지 ‘평화’

22) 坂本多加雄, 『求められる国家』, 東京: 小学館, 2001, 72쪽.

23) 西尾幹二, 『国家と謝罪』, 東京: 徳間書店, 2007, 89쪽.

24) 江藤淳, 『ごっこの世界が終わったとき』(1970), 福田和也 編, 『江藤淳コレクション1 史論』, 東京: 筑摩書房, 2001, 44~72쪽.

25) 江藤淳, 『忘れたことと忘れさせられたこと』, 東京: 文藝春秋, 1979.

26) 江藤淳, 『閉ざされた言語空間—占領軍の検閲と戦後日本』, 東京: 文藝春秋, 1989. 원래 『諸君!』 1982년 2월 및 12월호에 발표됨.

27) 江藤淳, 『一九四六年憲法—その拘束』, 東京: 文藝春秋, 1980.

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에토의 경우는 미일관계가 국가방위상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안보동맹을 통해 평화헌법의 군사력 불보지(不保持), 전쟁포기 조항을 온존시키고 미국이 일본사회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본의 주권이 제한받는다고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감각’이 아니라 성문헌법의 이념, ‘개혁’이라는 이념 위에 입국한 나라” 미국의 이질성에 위화감을 느꼈다.<sup>28)</sup> 에토 준도 ‘전후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미국의 규율성을 드러냄으로써 후쿠다 쓰네히리와 마찬가지로 전후체제의 모순·뒤틀림·왜곡을 폭로하고자 했다.

탈냉전기 보수주의자들도 에토 준의 헌법관을 계승하여 일본의 주체성, 혹은 인민의 동의를 주장하는 평화헌법의 인민 제정설이나 내각 제정설을 부정하고, GHQ의 헌법초안이 일본정부에 강요된 것임을 자명한 ‘역사적 사실’로 내세운다. ‘평화헌법’이 미국으로부터 강요된 헌법이며, 전후 일본의 타율적 비주체성이 ‘평화헌법’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공유한다.<sup>29)</sup> 하지만 탈냉전기 보수주의자들은 더 ‘진보’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국제국가’ 일본이 취약한 국제적 대응력과 비주체성을 드러냈을 때, 이들은 ‘전후체제’ 전체를 문제 삼는다. 탈냉전기 보수주의자들은 ‘전후체제’를 ‘평화’와 ‘민주주의’의 언설 공간이자 가치체계로서 간주하고 그 가치체계 자체를 부정한다. ‘전후체제’는 ‘평화주의’·‘민주주의’가 ‘공식적 언어’, 즉 체제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는 ‘체제’다.<sup>30)</sup> 진보주의자들의 ‘평화주의’와 사회계약론적 발상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지배한, 사카모토 다카오의 말을 빌리면, ‘평화와 민주주의의 역사관’<sup>31)</sup>이 만연한 진보적 가치체계의 공간이다. 이들은 ‘평화헌법’이라

28) 江藤淳, 『保守とはなにか』, 東京: 文藝春秋, 1996, 19~20쪽.

29) 에토 준은 1980년을 전후한 때부터 평화헌법의 타율성과 체제구속성을 비판하였다. 江藤淳, 『一九四六年憲法: その拘束』, 『諸君!』 1980년 8月号 및 江藤淳, 『一九四六年憲法: その拘束 補遺』, 『諸君!』 1980년 9月号. 두 글은 江藤淳, 『一九四六年憲法』, 東京: 文藝春秋, 1980에 수록됨. 대체로 니시베 스스무, 사카모토 다카오, 니시오 간지 등 보수논객들도 공유하는 헌법관이다.

30)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東京: 飛鳥新社, 2001, 95쪽.

31) 坂本多加雄, 『戦後日本の平和主義』, 21世紀日本フォーラム 編, 『戦後を超える』, 京都: 叢野書院, 1995.

는 제도와 '미국'이라는 권력이 만들어 낸 '진보이념의 공동체'(이상)와 '실제'(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생성되는 뒤틀림, 왜곡, 비주체성을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평화헌법'이라는 제도와 '미국'이라는 권력 자체를, 혹은 그 제도와 권력이 구성해 낸 이념체계인 진보주의, 합리주의, 경제주의를 부정한다. '허구로서의 전후체제' - '평화와 민주주의'의 전후체제를 거부한다.

'평화와 민주주의'의 '전후체제'에 대한 부정은 이념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가 공동체와 관련된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가의식'의 부상을 뜻한다. 새로운 보수주의는 '국가' 표상을 내세운다. 사에키 게이시는 진보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종언'<sup>32)</sup>, 즉 발전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면서 보수주의의 핵심에 '냉전 이후' 일본국가의 공동체적 구성과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자리매김한다. '국가'는 냉전 이후의 탈이념화 경향과 지구화의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수주의의 핵심 표상인 것이다. 사에키는 전후체제를 지탱한 '평화주의'는 점령정책의 편의적인 산물로서 '국익'을 담은 정치적 언어이며, 미국에서 이식된, 평화주의를 지탱하는 '민주주의' 이념은 '근대화' 맥락에서 보편적 이념, 추상적 진리로 절대화되었다고 본다. 현실주의는 '대미종속' 외교를 국익으로 간주함으로써 국가의식을 봉쇄하였고, 평화주의는 평화이념을 절대화함으로써 국가의식을 봉쇄했다는 말이다.<sup>33)</sup> 사에키가 포착하는 '전후체제'는 평화주의와 현실주의의 공범관계 속에서 '국가의식'이 '봉쇄'되어 버린 체제, '근대주의'가 경제발전을 가져오지만 '국가의식'을 약화시키는 패러독스의 체제다. 여기에서 지구화 맥락이 '문화파괴'(Vandalism)와 '국가의식의 약체화'(denationalization)를 부추겼다. 일본인들은 '혼(에토스)의 쇠약', 즉 '국가의식(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쇠약'에 빠졌다는 것이다.<sup>34)</sup>

32) 佐伯啓思, 『成長經濟の終焉: 資本主義の限界と「豊かさ」の再定義』, 東京: ダイヤモンド社, 2003.

33)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105~109쪽.

34)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 5. 보수의 감각

### 1) 보수의 정치감각과 일상감각

보수주의자들에게 '전후체제' 비판은 정치와 일상의 사이에서, 감각과 이념 사이에서, '전후체제'를 구성해 온 진보주의를 척결하려는 담론투쟁이다. 담론투쟁은 '보수감각'에서 나온다. '보수감각'은 견고한 보수주의의 파생물일 수도 있지만, 전후체제를 문제삼고 진보주의와 대결하는 가운데 발현된다. '보수의 정치감각'은 정치생활에서 영위되는 보수감각으로서 '전후체제'를 적극적으로 감지(문제시)한다. '보수의 일상감각'은 '전후체제'라는 체제환경(민주주의, 평화헌법, 미일동맹, 진보주의) 속에서 생성된 보수의 일상감각이다. 체제에 대해 정치감각이 자각적이라면 일상감각은 무자각적인 편이다. 당연히 개인과 국가에 관한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자들의 보수감각은 전후체제의 '평화주의'('자유민주주의')와 '발전주의' 속에서 양생된 두 형태의 보수감각, 즉 미국에 추종하는 보수정치기들의 '보수의 정치감각'과 경제적 풍요에서 생성된 일본국민들의 '보수의 일상감각'을 깨우려는 — 정치화하려는! — 의도를 지닌다.

일본의 '국가'는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 속에서 '평화'(평화헌법 이념의 구현자)와 '주권'(국제정치의 주체) 사이에서 제약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보수와 혁신 사이에서, 보수의 일상감각과 정치감각 사이에서 애매성을 띠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 국제책임을 담당하는 냉전체제와,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으로 구축된 평화체제 하에서 국제책임을 면제받은 일본 '국가'가 능동적인(proactive) 국제행위자(주체)로서 행동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발상은 약했다. 경제적 풍요와 중간층의 성장에 따른 중류의식의 확산이 평화의식을 지탱하면서 '보수감각의 일상화'는 더욱 진행되었다.<sup>35)</sup> 여기서 체제와 주체를 의식하는 보수의 정치감각과, 평화와 경제 속에서 향유된 보수의 일상감각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35) 石田雄, 『日本の政治と言葉(下): '平和'と'国家』,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9, 238-239쪽.

보수정권은 보수의 정치감각과 일상감각의 거리를 초래한 일본국가의 국제적 수동성(reactivity)<sup>36)</sup>을 극복하기 위해, 보수의 일상감각과 정치감각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보수의 일상감각을 정치감각과 연결하려는 ‘국민화’를 시도했다.<sup>37)</sup> 70년대 국가주도형 산업정책과 일본적 경영방식은 일상화된 보수감각을 정치감각으로 전환시킬 여지를 높였다. 산업정책과 기업을 매개로 개인의 일상적 보수감각은 이를 관리하는 ‘국가’로 연결될, 바꿔 말해 ‘경제’와 ‘국가’를 매개로 보수의 정치감각으로 바뀔 개연성을 높였던 것이다. 특히 80년대 나카소네 정권이 ‘국제화’와 ‘국제책임’을 요청받는 맥락에서 경제대국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민화’ 정책을 통해 일상감각에 내면화되기 시작한 ‘국민적 자부심’을 정치화하고자 했을 때, ‘국제화’와 ‘국제국가’ 지향이 ‘국민화’와 ‘국민공동체’에의 의지를 추동했을 때, 보수의 일상감각을 정치화할 여지는 높아졌다. 하지만 탈냉전과 걸프전쟁 상황에서 드러난 일본 ‘국가’의 대외적·대내적 취약성은 보수감각의 정치화가 성숙되지 못했고, 일상감각과 정치감각의 어긋남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국가’는 일상적 삶을 규율하는 행정을 행하는 기체였을 뿐, 국민공동체로서의 표상을 획득하지는 못했다.

## 2) ‘싸우는 보수’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의 일상감각을 정치감각으로 연결시키려 한다. ‘전후체제’에서 비롯된 보수의 일상감각을 일깨우려면 — 정치화하려면 — ‘전후체제’를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후체제에 대한 불만은 전후체제를 지배한 진보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다. 보수의 감각은 진보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한다. 후쿠다는 “보수

36) 일본국가의 수동성 - 능동성 문제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Kenneth Pyle, Susan Pharr), 국제체제와 국가전략, 정치체제의 상관 관계에서 생성된 ‘보수의 정치감각’이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37) 올림픽 개최(1964), 건국기념일 제정(1967), 메이지 백년제 개최(1968), 야스쿠니 법안화 시도(1969년 이후), 원호 법제화(1979) 등 국민적 행사와 법제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1981) 등 대중동원을 통한 ‘국민화’ 시도들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石田雄, 『日本の政治と言葉(下)』, 238~246쪽; 平石直昭, 『現代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 『社会科学研究』 58: 1(2006), 東京大学 社会科学研究所.

파는 눈앞에 개혁주의의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보수파임을 깨닫는다”<sup>38)</sup>고 말한다. 보수는 진보에 대해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논리’(이념)를 갖지만, 우선은 ‘감각’에 의존한다. 에토 준도 보수주의를 이데올로기보다는 ‘이스태블리시먼트(establishment)의 감각’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기득권의 존재기반’을 생각하는 감각, 보수 자체의 존재기반을 따지는 감각을 말한다. 에토는 작위와 지주의 기득권이 헌법(constitution)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 유지되는 사례를 통해 영국의 보수주의가 ‘이즘’(ism)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예증을 동원한다. 보수주의는 “우리들의 유의(流儀)를 지키면 된다는 보수감각”이라는 것이다.<sup>39)</sup>

보수 자체의 존재기반을 따지는 감각은 진보에 대한 수세적 반감을 넘어 공세적 보수감각이 성장하였음을 암시한다. ‘기득권의 존재기반’을 따지는 공세적 보수주의자들은 보수가 진보에 압도된 ‘전후체제’에 익숙해진 보수감각을 문제 삼는다. 경제사상사가 니시베 스스무(西部邁)는 “개인심리의 차원에서 파괴된 전통의 파편을 주워 모아” “과잉된 계획적 혁신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콘서버티브(방부제)로 삼는 것이 오늘날 콘서버티브(보수주의자)의 최대한의 자기증명”이 되어 버린 일본 보수의 현실을 개탄한다. ‘근대화의 이데(Idee)’가 승리하여 보수주의를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과잉된 계획적 혁신’(진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수’해야 하는 보수의 수세적 일상감각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보수주의의 심리는 궁지에 몰려 있”고, 여기서 ‘도착(倒錯)의 감각’이 생겨난다. “여론은 전통파괴에 의한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사회계획에 의한 미래의 창조에 대해 극히 낙관적이다. 여론은 좌우익을 불문하고 넓은 의미의 진보주의에 스스로의 정통성을 찾는다……[진보주의는 ‘장소(topos)가 없는’ 유토피아(utopia)이기 때문에] 유토피아 사상은 보수주의가 가장 기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론이 완전히 진보주의 색깔을 띤 현대에서는,

38) 福田恒存, 『常識に還れ』, 東京: 新潮社, 1960.

39) 江藤淳, 『保守とはなにか』, 27쪽.

그리고 여론이 나라를 만든다고 여겨지는 현대에서는 오히려 보수주의 쪽이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구상하는 듯이 보인다. 이 도착의 감각을 어떻게 견뎌 낼까, 이것이 보수주의의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다. ‘전후체제’는 원래 유토피아를 기피하는 보수주의가 오히려 유토피아를 찾아야만 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고 이 역설에서 ‘도착의 감각’이 생겨났다는 말이다. 그는 “현대에서 보수주의는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이며 유토피아다. 보수주의는 원래 아나크로니즘과 유토피아를 가장 꺼리는 것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이는 커다란 역설이며, 비즈니스 문명이 만들어 낸 커다란 조롱이다”라고 자탄한다.<sup>40)</sup>

흥미롭게도 니시베는 이러한 ‘도착의 감각’을 80년대 문화공동체(국민공동체)에 기초한 강력한 국제국가를 지향했던 ‘신보수주의’의 맥락에서 감지하고 있다. ‘도착의 감각’은 보수정권의 최절정기에 제시된 ‘국제국가-국민공동체-문화공동체’ 구상이 냉전체제와 신보수주의 국제연대에서 생겨난 외생적·비주체적인 것이며, 일상의 보수감각과 괴리된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미의존의 비주체성과 평화주의에 익숙한 보수의 일상감각이 만들어 낸 ‘전후체제’의 ‘허구성’이 더욱 크게 보였던 것이다. ‘도착의 감각’은 ‘전후체제’에 대한 총괄적 비판을 유발하는 근거가 된다. 니시베에 따르면, ‘전후체제’는 진보이념으로 ‘보수적 감각을 상실한 체제’, ‘전통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이다. 진보주의는 “인간이 지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보다 완전한 것에 접근해 간다는 가설을 믿는 태도”, 즉 ‘퍼펙티비리티(완전가능성)의 신념’이다. 그런데 현대 일본의 진보주의는 윤리성이 약해진 ‘뭉어진 진보주의’인데, 도수 낮은 알코올이 상습벽이 강하고 중독도 심하듯이 부단한 변화를 통해 ‘보수적 감각’을 눌러 왔다.<sup>41)</sup>

니시베의 보수감각은 ‘도착의 감각’을 극복하려는 ‘투쟁하는 감각’이다. 니시

40) 西部邁, 『幻想の保守へ』, 東京: 文藝春秋, 1985, 206~208쪽.

41) 西部邁, 『幻想の保守へ』, 216~217쪽.



베는 ‘도착의 감각’을 극복하려면 진보주의가 ‘인습’이 되어 버린 전후체제에서 그 ‘인습’을 깨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는 불변의 항상성에 구애받는데, ‘기지(既知)에의 반발’에 기초해서 ‘미지(未知)에의 공포’가 아닌 ‘미지에의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는 말이다.<sup>42)</sup> ‘싸우는 보수’의 모습이다. ‘진정한 보수파’는 ‘인습’을 깨야 한다. 그는 “전통파괴라는 현대의 인습을 보수하려는 것은 가짜 보수파이고, 인습을 거스르는 것이 진정한 보수파다”라고 단언한다. 니시베는 ‘인습’과의 투쟁을 위해 보수주의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환상”으로 규정하고, ‘가치와 이상과 신앙’을 추구하는, 관습 속에 서서히 축적된 ‘의도하지 않은 모험’을 부추긴다. ‘의도하지 않은 모험’이란 “비합리도 시인하려는 용기”, “선인들의 용기를 추체험하는 용기”다.<sup>43)</sup> ‘비합리적인’ ‘환상의 보수’는 ‘의도하지 않은 모험’을 실행할, 투쟁할 ‘용기’를 부여받은 셈이다. ‘합리적 기획’이 아니라 ‘비합리적 환상’을 설정함으로써, 보수주의는 진보주의처럼 싸우는 감각을 갖추게 된 셈이다. 여기에는 진보와 싸우기 위해 진보에게 배우며, 유토피아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유토피아(환상)를 설정하는 역설이 성립한다. ‘도착의 감각’ 혹은 ‘궁지’를 벗어나려는 보수의 심리는 또다른 역설을 잉태한 것이다. 적과 싸우고자 적의 장점을 배우고, 권력세계에서 살아남고자 투쟁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일본의 현실주의 전통<sup>44)</sup>과도 맞는 역설이다.

## 6. ‘국가’

### 1)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

보수지식인들은 진보와 전후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의 감각을 간직한다. 탈냉전은 투쟁의 감각을 투쟁의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자극이 되었다. 일상감각의 정치화는

42) 西部邁, 『幻想の保守へ』, 206쪽.

43) 西部邁, 『幻想の保守へ』, 210쪽.

‘국제국가’ 구상이 ‘국가’의 대내적 존재양식을 자극하고 걸프전쟁이 ‘국제국가’ 일  
본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지구화는 정치적 보수감각의 출현을 부추  
겼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도전은 ‘허구의 자폐적 세계’(전후체제)를 총체적으로 비  
판하는 심리와 논리를 수반하였다. 심리는 감각만으로도 성립하지만, 논리는 이론/  
이념을 필요로 한다. ‘환상’(유토피아)을 창출해 낸 니시베와 동업자들은 전후체제  
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환상’의 이론화를 시도한다.

경제사상사가 사에키 게이시는 여러 보수지식인들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보수주의 이론가에 속한다. 사에키는 보수는 ‘보수적 태도’가 아니라 ‘주의’(ism)여  
야 하며, 현대 일본은 “보수를 위한 변혁, 혹은 르네상스(부흥)라는 의미에서의 개  
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가 전후 일본의 ‘체제’를 이루면서  
‘반체제’적인 체제, ‘반권위주의’적인 권위주의, ‘반국가주의적’인 국가의식이 전후  
일본의 정치관념을 규정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주의’와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  
이다.<sup>45)</sup> 보수는 ‘감각’을 넘어 ‘변혁이념’을 갖출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진술했듯이 사에키는 전후체제를 ‘허구적 세계’로 규정한다. 전후의 ‘일본이라  
는 닫힌 언어공간’은 글로벌리즘과 내셔널리즘이 서로 비난하면서 만들어 낸 ‘허  
구’였고, 따라서 국제주의도 내셔널리즘도 허구였다는 것이다. 국제주의자나 세계  
주의자들은 국가관념을 지녔는데도 자기이익 때문에 ‘국제주의’ ‘세계평화’라는 말  
을 만들어 냈고, 내셔널리즘은 단지 민주주의나 전쟁 비판에 대한 감정적 반발일  
뿐, 국제주의/세계주의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다고 말한다.<sup>46)</sup> 보수주의 이념은 이  
러한 상상의 국제주의와 내셔널리즘이 만들어 낸 ‘닫힌 언설 공간’-‘허구’를 깨는  
체제이념으로서 상징된다. 보수주의는 경험적이고 정서적인 공감을 중시하기 때

44) 적의 장점을 배우고 투쟁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일본의 현실주의 전통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였다. 이를 잘 정리한 최  
근 저작으로는 Kenneth B. Pyle, *Japan Rising : The Resurgence of Japanese Power and Purpose*, New York :  
Public Affairs, 2007. 특히 제2장과 제4장을 볼 것.

45)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30~31쪽.

46) 佐伯啓思, 『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124~126쪽.

문에 추상적인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옹호하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나 공리주의와 대립하며, 국가를 유일한 사회적 실재로 여기는 국가주의와도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수주의는 추상적인 개인주의와 전체적인 국가주의 둘 다에 대항하는 이념이라는 것이다.<sup>47)</sup> 보수주의는 반체제적 사상으로 간주된다. “근대의 진보는 보수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변혁이 합리화되었을 때 보수주의가 등장했고, 따라서 보수주의는 근대에서 가장 반체제적인 사상이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파시즘의 원천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상으로 전체주의와 대립하는 ‘가장 반체제적인 사상’이며, 계몽주의·진보주의·사회개량주의·민주주의에 회의적인 사상으로 이해된다.<sup>48)</sup>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반체제적인 사상’이라는 속성을 반추함으로써 보수주의를 전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반체제 이념으로 설정한 것이다. ‘싸우는 감각’이 ‘싸우는 이념’으로 전환되어 있다.

사에키가 파악하는 현대 보수주의는 계몽적 이성이 초래한 ‘근대주의의 패러독스’를 자각하고 ‘근대화’라는 불가역적 운동을 ‘가능한 한’ 유보하는 사상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는 추상적인 이상보다도 현실에 있는 구체적이고 가까운 것에 대한 애호, 합리적인 사회설계보다도 비합리적인 관습 속의 안정된 것에 대한 신뢰, 신뢰하는 가족/지역/자발적 집단에 대한 애착, 글로벌리즘보다는 절도있는 애국심,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와 시장중심주의에 대한 회의와 강력한 국가주의(statism), 자유와 민주주의의 절대화·보편화에 대한 경계, 그리고 민주정치에 대중화·대중영합 정치에 대한 비판 등을 내용으로 삼는다.<sup>49)</sup> 앞의 세 개는 고전적 보수주의와 공유하는 항목이며, 뒤의 네 개는 근대주의와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글로벌리즘의 위협에 처한 일본 전후체제를 비판하는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이다. 사에키는 자유주의(개인주의), 시장주의, 민주주의를 대신하는, ‘전체적 국가주의’와

47)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24~26쪽.

48) 佐伯啓思, 『日本の戦後保守主義を問う』, 『中央公論』, 2007년 2월호, 148쪽.

49) 佐伯啓思, 『日本の戦後保守主義を問う』, 149~150쪽.

도 대립되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운다.

사에키의 비판적 전후체제론은 합리주의(시장경쟁,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만들어 낸 '근대화의 덫'('근대화의 패러독스')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다. 근대화는 국가와 커뮤니티, 인간관계, 공통의 가치관과 역사라는 관념을 부정하였고, 근대화의 무조건적 확장이 오히려 근대사회를 지탱한 조건을 무너뜨렸다는 관점이다. 사에키는 '근대화의 역설'이 미국에 기인한다고 본다. 미국의 강한 자장 속에서 인민주권 이념 위에서 전개된 민주주의와 산업주의가 일본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는 인식이다. 사에키는 전후 일본의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주의와 가치상대주의 때문에 '공공적 관심'이 취약하고 타자에 무관심, 무책임하다고 본다. "개인의 주관을 초월한 공유가치", 즉 '공유문화'·'공공문화'를 존중하는 정신이 있어야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의 요체는 사회적 모럴, 의무감, 공공정신, 공공이익이며, 이러한 요체가 갖추어진 한에서 민주주의는 의미를 갖는다.<sup>50)</sup> 보수주의의 전후체제론은 전후 일본의 합리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총체적 비판이다.

## 2) '국가' 표상의 재구축, 내러티브의 재구성

보수주의자들은 '전후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현실'(확립된 표상세계)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재구성한다. 사에키에 따르면, '현실'(reality ; 실제)은 '상상력'(imagination ; 표상화·재현)에 의거해 구성된 '표상'(image, representation), 즉 '표상된 세계'(imaginary world) 혹은 '가상세계'(virtual reality)이며, 따라서 '허구'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신뢰할 수 있는 허구'다. 사회의 룰이나 법, 다양한 규범과 약속은 제작된 것이며 일정한 가치관을 내포하는 한 '허구'이지만, 이러한 현실을 양해하는 가치관과 사고양식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한에서 '현실'을 살기 때문이

50) 佐伯啓思, 『現代民主主義の病理: 戦後日本をどう見るか』, 東京: 日本放送出版協会, 1997, 223-234쪽.

다. 사람들은 ‘상상의’(imaginary) 세계에 살지도, ‘사건들이 모인’(factual) 세계에 살지도 않는다. 일어난 일(fact)을 공통의 양해에 받아들이는 상상력(imagination)을 잃어버릴 때 리얼리티를 상실하게 되고, 상상력이 ‘공통경험으로서의 사실(fact)’의 뒷받침을 잃어버릴 때 ‘허구’(fiction)의 세계에 ‘자폐’하게 된다. ‘현실’이란 공통의 양해가 지탱하는 ‘신뢰할 수 있는 상상력’에 뒷받침되는 사실의 집합이다.<sup>51)</sup> 사에키는 전후 민주주의가 ‘공통경험으로서의 사실’을 해석하는 상상력을 빼앗았다고 비판하면서 전후체제라는 ‘현실’-‘허구’-‘허구의 자폐적 세계’를 폭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새로운 신화의 구축을 시도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후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평화헌법의 탄생과 성격에 관한 ‘신화’를 깨는 것은 일차적 작업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표상을 재구축하는 일이다. 사에키는 “역사의 지혜나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경험의 퇴적, 그리고 그 에센스라 할 건전성의 감각”을 구축함으로써 ‘전후체제’를 해체하고 ‘공통경험’에 토대를 둔 ‘신뢰할 수 있는 허구’를 재구축한다. ‘경험의 퇴적’은 ‘역사’로, ‘건전성의 감각’은 ‘국가’로 수렴되며, ‘경험의 퇴적’(역사)은 ‘건전성의 감각’(국가)으로 귀결된다. ‘국가’는 불안울 해소하고 ‘혼의 부흥’을 가져올 유력한 표상이 된다.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는 ‘건전성의 감각’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국가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체험인가”를 체득하는 것, “가까운 전사자를 생각하고 마음 어딘가에 ‘유사(有事)에 대한 각오’를 둘러싸고 국가의 무력행사가 지닌 의미와 개개의 옹고 그림에 대해 항상 사색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체험과 습관은 국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정치적 성숙’을 갖는다는 말이다.<sup>52)</sup> 여기서 국가를 ‘자기를 규율하는 공동체’이자 ‘타자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로서 표상하고(재현작용), 이 표상을 국민에게 구현함으로써(구현작용) ‘허구

51) 佐伯啓思, 『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23~26쪽.

52) 坂本多加雄, 『求められる国家』, 76~77쪽.

적 세계'를 벗어나 '실체적 세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내셔널리즘, 애국심, 내셔널 아이덴티티 등은 '국가' 표상과 관련된 심정들이다.

사카모토는 전후체제의 '신화'를 깨는 한편, 일본의 이야기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3)</sup> 사에키는 현대 일본사회가 붕괴한 원인을, 전후 일본사회에서 신화나 전승, 역사를 포함한 모든 공유된 '이야기'가 죄다 부정되어 '과학'으로 대체되었고, '공유된 가치'가 '각자의 자유'로 치환되었다는 데서 찾는다. 민주주의나 과학(사실의 니열적인 기억)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할 수도, 리얼리티를 줄 수도 없다. '신뢰할 수 있는 허구'-'현실'을 재구성하려면 '생활의 실감'(경험)과 '건전성'에 기초한 '공통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의지하고 질서짓는', '개인의 기호를 넘어선', '절대적인 무언가'를 찾는 행위다. "우리들이 아무리 해도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절대적인 것"은, 절대자(신)를 갖지 못한 일본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인간의 이성'과 같은 공식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예의나 습관, 권위 속에서 일상생활의 질서를 세우는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4)</sup> '공통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공동체의 관습과 가치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통의 이야기'의 새로운 서술은 공동체 역사의 재구성을 뜻한다. 공동체는 국민공동체, 문화공동체로서의 '국가', 즉 정치적 표상과 문화적 표상을 공유한 국가로 상징된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구성물, 혹은 사회계약에 의한 인위적 결사거나 아니라 개인을 초월해 일본인들의 예의, 습관,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비공식적 관계를 질서짓는 소여의 공동체로 이해된다. 여기에 '국가' 표상이 강하게 연루된다. 극우 세력들은 '천황제국가' 표상의 구현을 의도한다. 그들에게 '공통의 이야기'는 '국체' 내러티브로 족하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역사'는 '자랑스러운'

53) 坂本多加雄, 『求められる国家』.

54) 佐伯啓思, 『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 26~32쪽. 사에키는 '공유된 이야기'가 전승, 영웅담, 신화, 고전, 동화도 좋고, 일본 역사나 사회에 관한 사회과학적 분석도 좋고, 미래를 향한 이상이라도 좋다고 말한다.

문화공동체 혹은 도덕공동체를 구성해 내는 작업이며, 천황은 국가공동체에서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적 기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공통 내러티브 구축은 역사적 사실의 탐구가 아니라 주관적 국가의식을 투사한 역사의 재구성이다. 새역모 이테올로그들이 저술한 『일본의 도덕』(니시베 스스무), 『일본의 문명사』(나카니시 테루사마), 『국민의 사상』(야기 히데쓰구 八木秀次 등<sup>55)</sup>은 보수내러티브의 극단적 표현이다.

### 3) '강한 국가' 혹은 '균형체로서의 국가'

보수주의자들이 상징하는 '국가'는 일본문화론자나 보수정치가들이 정치적 수사로서 말하는, 일본문화의 관습과 가치에 기초한 문화공동체, 혹은 사회적 도덕과 규율, 관습이 만들어 내는 도덕공동체인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국가상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일본'이란 국가 표상은 1980년대 경제대국화에서 비롯한 자신감과 일본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함축하며, '문화국가'와 결부된다. '아름다운 일본'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노벨문학상 수상연설 '아름다운 일본의 나'(1968)에서 심미적 표상을 극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sup>56)</sup> 일상감각에 스며든 '일본적 미'와 '일본정신'을 구가한 가와바타의 '아름다운 일본'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일본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던 때에<sup>57)</sup> 세계를 향해 발신된 것이었다.

나카소네는 국제화라는 동력을 매개로 '국제사회 속의 국민국가'를 지향하면서 경제적 삶에 기초한 일상감각과 국제공헌을 수행하려는 정치감각을 결합한 '문화국가'를 상징한다. 나카소네는 일본국가를 "세계에 공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운명공동체인 동시에 문화공동체"로 상징하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경제

55) 西部邁, 『日本の道徳』, 東京: 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2000; 中西輝政, 『日本の文明史』, 東京: 扶桑社, 2003; 八木秀次, 『国民の思想』, 東京: 産経新聞ニュースサービス, 2005.

56) 川端康成, 『美しい日本の私: その序説』, 東京: 講談社, 1969. 패전 직후 진보지식인들(마루야마 마사오, 구와바라 다케오 등)도 새로운 일본을 '문화국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때 '문화국가'는 일본의 전통과는 단절된, 근대 문화에 입각한 국가 표상이었다.

57) 아오키 다모쓰, 최경국 옮김, 『일본문화론'의 변용』, 서울: 소화, 2000.

발전과 민주주의로 단절된 ‘커뮤니티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할 가치는 ‘아름다운 일본’이며, ‘아름다운 일본’을 구성하는 일본인의 ‘일상의 삶’이다.<sup>58)</sup> 보수정치가들에게 ‘아름다운 일본’은 문화적·심미적 표상을 넘어 정치적 신념이자 정치적 수사로서 재생산되고 있다.<sup>59)</sup>

보수주의자 니시베 스스무는 ‘아름다운 일본’의 정치적 수사성을 비판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정치적 수사만으로는 탈냉전과 지구화의 새로운 맥락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은 글로벌 시장경제가 개인의 욕망을 해방하고 이동의 자유와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글로벌리즘의 위협에 대항할 국가의 존재와 역할을 중시한다. 사에키는 시장의 고도화가 버블 경제와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경제에 대응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기제로서 국가는 정치적 역할을 다시 부여받았다고 진단한다.<sup>60)</sup> 그는 국가를 비판하면서도 국가에 기대를 걸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국가에 의존하려는 일본인들의 이중적 정신구조를 지적하면서 ‘강한 국가’를 요구한다. 사에키에 따르면,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되고 세계자본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불확실성’과 ‘위기’가 커져 시장의 자기책임과 제도적 안전장치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의사와 실행력을 가진 정부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조건과 정신풍토를 갖춘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 국가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의 주체로서 일본의 장래를 구상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행하며,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sup>61)</sup> 동

58) 中曾根康弘, 『新しい保守の論理』, 東京: 講談社, 1978, 32~34쪽, 193~194쪽.

59) 安倍晋太郎, 『美しい日本へ』, 東京: 文藝春秋, 2006; 町村信孝, 『保守の論理: 凛として美しい日本をつくる』, 東京: PHP研究所, 2005. 한편, 진보 문학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노벨문학상 수상연설에서 기와바타의 ‘아름다운 일본의 나’를 비틀어 ‘애매한 일본의 나’(1994)로 표현한 바 있다. 大江健三郎, 『あいまいな日本の私』, 東京: 岩波書店, 1995.

60) 佐伯啓思, 『現代社会論: 市場社会のイデオロギー』, 東京: 講談社, 1995, 286쪽.

61) 佐伯啓思, 『成長経済の終焉』, 113~117쪽.



시에 ‘강한 국가’는 역사적·문화적 형성체여야 한다. ‘강한 국가’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실행능력뿐 아니라 국가가 갖는 역사적·문화적인 가치와 표현 형식의 힘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권력뿐 아니라 공통의 가치도 필요하다.<sup>62)</sup> 사에키는 “국가는 권력장치가 아니라 다양한 룰과 습관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합체이며, 그 속에는 권력장치도 있고 시장활동과 개인의 자율을 보장하는 룰도 있다”<sup>63)</sup>고 말한다. 권력기제로서의 국가를 ‘룰과 습관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합체’, 즉 공동체로서의 국가로 회수시키는 국가관이 읽혀진다.

사에키는 공동체로부터의 해방을 자아의 확립으로 간주하는 근대주의적 사고 방식을 거부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기초해서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개인과 국가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외재적·기능적 국가관’ - ‘계약론적 국가관’을 부정한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상정한 ‘파시즘 대 민주주의의 항쟁’ 구도도, 이 구도 위에서 구축된 ‘민주적 주체’도 허구라고 부정한다. 계약적 국가관은 진보학자들의 ‘공식적 언설’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감과 비판, 즉 ‘반국가주의적 심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에키는 국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국가관’을 제시한다. ‘사회의 혁명적인 대전환’을 경험하지 않은 일본에는 역사와 전통과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역사적 국가관’이 맞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통치기구로서의 ‘국가’가 ‘국민’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일체로서의 ‘네이션’이 하나의 공통의 주권을 품고 근대적인 통치기구로 전개되면서 근대적인 ‘스테이트’가 생겼다”는 말이다. 천황제는 통치와 국가의 계속성의 상징적 권위로서 정당화된다.<sup>64)</sup>

‘역사적 국가관’은 역사와 전통에만 의존하는 국가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사에키는 지구화에 대항하는 ‘균형체로서의 국가’를 구상한다. ‘균형체 국가’는 시간과 공간의 두 축에서 성립한다. 우선 국가는 “‘관심/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62) 佐伯啓思, 『成長經濟の終焉』, 119~123쪽.

63)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99쪽.

64)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제3장, 제4장.

으로 이해된다. 국가를 ‘공통의 관심/이익’의 시간축에 놓았을 때 규칙의 단절과 연속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견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조정하는 규칙에는 “실정적이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인 법과, “역사적·문화적인 조건에 의존하고, 문맥에 의존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관행이 있다. 법은 ‘정치’와 관련된 국가의 ‘시민적 측면’이고, 관행은 ‘역사·문화’와 관련된 ‘에스닉(ethnic)·계보적 측면’이다. ‘정치’는 불확정한 장래를 향해 국가를 기획하는 것이며, ‘역사·문화’는 지나간 과거와 퇴적된 경험에 눈을 향한다. 국가는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조건을 장래를 향해 넘겨 주고, 그 재료에 의해 미래를 향해 새로운 상을 조형해 나가는 기획”이다. 두 벡터 간의 균형이 깨지면 한편에서는 세계주의, 다른 한편에서는 근본주의의 위협을 받아 국가는 분열한다. 한편, 국가를 ‘공통의 관심/이익’의 공간적 확산·분산에 두고 볼 때, 이익의 분산/조정은 경제적 이익의 차원과 문화·사회생활의 아이덴티티 차원이 있다. 경제적 이익은 ‘시장경제’에 의해, 문화·사회생활의 아이덴티티는 다양한 ‘소집단’과 ‘커뮤니티’에 의해 조정된다. 공간축의 국가는 한편에서는 글로벌리즘의 위협을, 다른 한편에서는 분리주의의 위협을 받는다. 시공간의 두 축 위에 성립하는 국가는 “(‘시민적’정치’, ‘시장경제’, ‘소집단’ ‘역사·문화’에 의거하여 외부와 연결되고, 그 ‘외부’의 과잉 침입을 저지하려는 집합체”이다. 국가는 이 요소들이 균형을 보전해야 안정된다.<sup>65)</sup> 사에키의 균형체 국가론은 고정된 전통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대의 미디어적 환경과 시장세계에서 구성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며, 국가의 시공간적 존재양식을 기능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균형체 국가론은 사에키가 국민공동체를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기능적 관점에서도 이해하는 합리적 보수주의를 지녔음을 보여 주지만, 사에키의 합리적 보수주의는 ‘상상의 공동체’를 실재화하려는 또다른 측면에 의해 약해지곤 한다. 사에키는 앤더슨처럼 국민을 ‘상상의 공동체’로 이해

65)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285~292쪽.

하지만, 인쇄자본주의, 공통의 정보에 기초한 익명성의 동시적 활동, 공통의 세속적 시간감각, 공동화된 이벤트는 ‘국민’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만 본다. 사에키가 생각하는 ‘상상의 공동체’(국민)는 익명의 사람들이 ‘우리들’로서 상상되고 이 상상에 의해 ‘우리들’ 안에 에워싸여진 공동체다. ‘국민’은 공동 경험이 아닌 것이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우리들’에게 ‘공통의 경험’이라는 ‘상상된 것’으로 변환되는 지점에 성립한다. 여기서 ‘국민’이라는 ‘상상된(imagined) 공동체’는 ‘상상의(imaginary) 공동체’가 아닌 ‘실재’로 간주된다.<sup>66)</sup> 개인들이 ‘공통의 경험’을 ‘상상’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을 가질 때 국가는 성립된다는 말이다. ‘국가’가 최고의 공동체로 상정되는 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국가의식’을 매개로 ‘상상’의 존재는 ‘실재’로 전환되는 셈이다.

#### 4) 국가의식과 애국심

폐전 직후 진보지식인들은 ‘조국’ ‘모국’에서 ‘국가’를 떼어 내고 ‘민족결합체’ ‘운명 공동체’로부터 ‘국가’를 분리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조국=생활공동체’에 대한 ‘조국애’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해 오쿠마 노부유키(大熊信行)는 ‘국가’를 ‘개념세계’로서 조작화하는 진보주의적 국가관을 비판하면서, 진보지식인들의 ‘개념세계’로부터 ‘국민의 마음’을 구별해 내고 ‘국가악’(國家惡)을 ‘국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 내재하는 ‘인간악’(人間惡)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다. 그는 ‘전쟁체험’ 또는 ‘국가체험’을 매개로 ‘국가’=‘조국’이라는 등식을 유지하고자 했다.<sup>67)</sup> 전후체제는 오쿠마의 비평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아마도 사에키라면 진보주의의 ‘공식적 언설’(개념세계)이 ‘국민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고, 이로 인해 ‘애국심’이 퇴색하고 ‘국가의식’이 소멸되어 버렸다고 말할 것이다. ‘전쟁체험’

66) 佐伯啓思, 『現代日本のイデオロギー』, 101~104쪽.

67) 大熊信行, 『個における国家問題』(1947), 大熊信行, 『国家惡：人類に未來はあるか』, 東京：潮出版社, 1969, 129~194쪽.

이 부정되는 맥락에서 ‘국가=조국’의 등식은 성립하기 어려웠다. 전후 내셔널리즘이 부정적 의미를 띠게 되면서 일상감각으로서의 애향심은 유지되었지만 정치감각으로서의 애국심은 약해졌다. 수정주의자 윌프렌(Karel van Wolferen)은 “일본 문화론’을 아무리 해도 애국심은 자라지 않는다”, “일본인은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지만, ‘일본인다움’을 자화자찬하는 ‘일본문화론’은 아주 좋아한다. 이는 모순이 아니다. ‘특수한(unique) 일본’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진정한 애국심의 육성을 방해한다”<sup>68)</sup>고 비평한 적이 있는데, 일본문화론에 표출된 문화적 자긍심이 애국심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전후체제의 중요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사에키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일본인들이 전후체제의 평화주의와 근대주의로 인해 ‘국가의식’을 봉쇄당했고, 일본국가가 ‘국가로서의 판단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에 더해 지구화는 ‘문화파괴’뿐 아니라 일본인들의 ‘혼’=‘국가의식’의 약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sup>69)</sup> 그리하여 ‘국가의식’의 소생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사에키의 경우 국가의식은 애국심에서 시작한다. 애국심은 도덕에 기초한다. 그에게는 세계인류에의 상상도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직장’, ‘우리 나라’ 의식의 동심원적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도덕은 보편적인 정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경험의 퇴적으로서의 역사적인 것, 관습적인 것 속에서 피낼 수 있다.” “모르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보다도 ‘익숙한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 속에서 바로 도덕의 싹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덕은 파트리(향토)에 대한 애착, 즉 애국심 혹은 내셔널리즘과 결부된다.<sup>70)</sup> 그가 말하는 도덕이란 일상적인 것, 가까운 것, 쉽게 접하는 것과의 관계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습관적 타당성’이다. 도

68) Karel van Wolferen, *Why Can't the Japanese Love Japan?*, 大原進 譯, 『なぜ日本人は日本を愛せないのか』, 東京: 毎日新聞社, 1998.

69)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110~111쪽.

70) 사에키 게이시의 내셔널리즘과 애국심에 관한 최근의 상세한 논의로는 佐伯啓思, 『倫理としてのナショナリズム: グローバリズムの虚無を超えて』, 東京: NTT出版, 2008; 佐伯啓思, 『日本の愛国心: 序論的考察』, 東京: NTT出版, 2008.

덕성이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추상성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책임을 수행하는 세계, 즉 가족, 지역, 동료, 집단과 같은 커뮤니티에 결부된다. 국가는 '커뮤니티의 중층적인 연결체(連接體)'이고, 국가의 기본적인 문화나 가치는 다양한 커뮤니티에 의해 구현된다. 도덕성은 커뮤니티와 국가를 결부시켜서 논해야 한다.<sup>71)</sup> 결국 커뮤니티의 동심원적, 혹은 중층적 확산을 통해 개인은 커뮤니티에 대한 사랑(애향심)에서 나아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도덕은 커뮤니티의 속성이며, 따라서 커뮤니티의 중층적인 구성물인 국가의 속성이 된다.

사에키는 개인을 역사적인 경험, 유대, 퇴적 속에서 국가와 연결되는 존재로 본다. "개인은 같은 공간 속에서 태어나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공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국가를 부하하고, 역으로 국가는 개인에 의해 실현되어 간다"고 말한다. 개인과 국가는 '좋고 싫음을 초월한 숙명'이며, 내셔널리즘은 '숙명의 자각'이다. 개인의 사고의 틀이나 생활의 회로, 인간관계의 양식, 교양의 존재 양식을 만드는 것은 집단의 역사적인 '공(共)경험'이다. 이 '공경험'에 대한 자각과 의식적인 관여가 '국가의식'이고 '내셔널리즘'이다. 다만 가족, 부자, 친구관계, 학교, 문화적 환경, 사회 집단이라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면서도 "국가나 민족이라는 집단으로 해소될 수 없는 잔여로서의 개인성(individuality)"은 인정된다. 여기서 '국가의식'은 '개'(個)를 부정하는 국가주의와 구별된다. "결코 국가에 해소되지 않는 개인은 국가적인 것에 대해 의식적이고 자각적이며, 때로는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sup>72)</sup>

'국가의식'을 재생시키려 할 때 '전쟁체험'의 감각을 소생시키려 애쓰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카모토 다카오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체험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는 평온하게 살면서 때로 가까운 전사자를 생각하고 마음 어딘가에 '유

71)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87-92쪽.

72)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27-29쪽.

사(有事)에 대한 각오'를 둘러싸고 국가가 왜 무력행사를 하는지, 개개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사색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마음가짐’이며 ‘정치적 성숙’이라 주장한다.<sup>73)</sup> 이것은 “국가는 우리들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의식,<sup>74)</sup> 즉 ‘국가의식’을 양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야스쿠니’는 ‘전쟁체험’의 표상으로서 동원되고, ‘전쟁체험’의 근거인 ‘대동아전쟁’은 ‘식민지 해방전쟁’으로서 정당화된다. ‘전쟁체험’은 투쟁의 보수감각을 일깨우는 근거인 셈이다. 에도 무사들이 ‘도쿠가와 평화’ 속에서 투쟁감각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전투의 기억’(간접적인 전쟁체험)을 되살렸던 것과 비슷하다. 글로벌리즘의 맥락에서는 ‘전쟁체험’의 반추보다 국가방어가 더 절실한 문제가 된다. 글로벌리즘은 일종의 새로운 ‘전쟁체험’을 제공한다.

## 7. 맺음말 : 또 하나의 ‘허구’

보수의 심리는 전후 일본의 국가와 사회를 보는 보수지식인들의 불안감에서 나왔다. 불안감의 원인은 일본사회가 공동체적 윤리와 국가의식을 상실하였다는 판단, 미일안보동맹과 평화헌법이라는 제도와 진보주의(근대주의)라는 이념으로 분식된 전후체제가 이를 초래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보수론자들은 일본국헌법 ‘평화’ 조항의 명분과 실제 사이에 나타나는 ‘비틀림’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전후체제가 만들어 내는 ‘공식적 언설’(체제 이데올로기)과 ‘비공식적 언설’ 사이의 ‘어긋남’을 추궁한다. 이 ‘비틀림’ ‘어긋남’은 전후체제를 부정하는 강력한 심리적 근거를 이룬다. 이 심리는 공동체적 윤리와 국가의식으로 치장한 운명공동체·문화공동체·윤리공동체로서의 일본국가를 표상의 준거로 상정하는 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

73) 坂本多加雄, 『求められる国家』, 76~77쪽.

74) 坂本多加雄, 『求められる国家』, 57~65쪽.

다. 이 심리에 기초하여 전후체제는 사회계약론적 국가상을 갖는 진보주의(근대주의)의 ‘공식적 언설’이 공동체적 국가를 추구하는 보수주의의 ‘비공식적 언설’을 압도한, ‘허구적 세계’, ‘자폐적 사고 공간’이었다고 규정된다. ‘평화헌법’ 제정의 강제성·비주체성과 ‘미일안보동맹’의 보호성·의존성이 ‘국가로서의 판단능력 상실’ 내지 ‘국가의식의 약화’도 초래했다는 인식은 ‘공동체 국가’와 ‘완전한 주권체’의 표상에서 도출된다. ‘불안’, ‘비틀림’, ‘어긋남’의 심리건, ‘국가의식’이건, 여기에는 주체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주체 관념은 국민국가·주권국가 개념에 의존한다. 보수지식인들은 진보주의의 ‘공식적 언설’ 세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완전한 주체를 재구축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인 근대적 주체를 해체하고 공동체적 주체를 ‘역사적 국가관’에 의거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진보지식인들은 자유주의적 개인과 협력적 국제사회 속의 국가를 상정하는 반면, 보수지식인들은 공동체적 개인과 경쟁적 국제사회 속 국가를 상정한다. 주체의 재구축은 근대적 개인을 부정하고 근대적 국가를 긍정하는 논법에서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법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되는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서는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완전한 주권’ 표상이 오히려 허구인 것이 아닐까. 주권을 관계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동맹체제에서 주권 제한은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의 대가였을 따름이다. 그들은 정치적 현실주의가 요구되는 냉전체제의 맥락에서 진보주의자의 ‘일국 평화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같은 논리라면 탈냉전의 맥락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일국 보수주의’의 허구성을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들은 대내적 주체인 개인에 대해서는 공동체(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성’(共同性) 속에 있기를 요구하면서, 대외적 주체인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공성’(公共性) 속에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 개인도 국제적 주체로 행동한다. 주체에 관한 안과 밖의 이중 기준은 그들 역시 ‘근대주의’에 구속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안과 밖의 이중 기준은 ‘비틀림’, ‘어긋남’의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 ‘비틀림’, ‘어긋남’은 안과 밖

을 통괄하는 ‘국제사회’라는 영역을 설정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틀림’은 탈냉전이 조성한 ‘국제사회’ 영역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생성되고 있다.<sup>75)</sup>

일본 보수주의자들의 ‘국가’ 표상에는 ‘개인-국가’ 구도가 있을 뿐, ‘사회’ 영역이 배제되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설정한 ‘사회-국가’의 대립 구도를 깨고자 ‘개인-국가’의 상보적 구도를 들고 나온다. 원래 유럽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개인-국가 관계만을 상정한 것과 달리, 개인-국가 관계에 가족, 사유재산, 커뮤니티, 교회, 사회계급 등 중간 집단/결사를 추가하여 양자를 매개하는 동시에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집단의 권리를 중시하였다.<sup>76)</sup>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라는 제도를 매개로 생성되는 ‘공동성’ 속에 존재하는 개인을 상정할 뿐, 개인들의 사회적 소통과 사회적 경험에서 생성된 사회적 공공영역을 생각지 않는다. 사에키는 개인성과 공동성의 상호구성적 과정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개인-국가’ 구도에서 ‘사회’는 ‘국가’로 수렴되어 소멸되고 만다. 가족, 지역, 동료, 집단과 같은 커뮤니티를 상정하고 이 커뮤니티들의 연쇄적 상승 과정을 통해 ‘국가’를 만나는 회로를 설정하지만, 각 커뮤니티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 영역은 배려하지 않는다. 집단의 ‘공통 경험’만을 얘기하고 ‘공동성’의 요구만 있을 뿐, ‘공공성’의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지구화의 침투성에 직면해서 공동방위체로서의 국가를 상정하는 데 열심이다. 스스로 ‘국가’라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꼴이다. ‘국가’는 보수주의자들의 준거이자 지향점이다. ‘사회’ 영역이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개인이 어떤 중층적 과정을 거치고 퇴적을 거치든 국가로 회수되어 버리고 ‘국가’가

---

75) ‘비틀림’을 해소하는 진정한 주체는 ‘가해자 - 피해자’ 구도를 미국과 일본의 관계구도뿐 아니라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구도를 함께 설정할 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전후체제’에서 결락된 ‘아시아’를 탈냉전의 맥락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읽어 낼 필요가 있다.

76) 니스벳, 『보수주의』, 43~45쪽.



지구화에 대항하는 방위체로 설정된다면, 보수주의자들 스스로 '자폐'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구화의 맥락에서 세계와 국제사회에 대해 그들 스스로 '허구적 세계' '자폐적 사고 공간'에 닫혀 버릴 수도 있다. 어쩌면 병리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사회현상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은 오히려 진단자의 병리적 증세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파인더에 비친 피사체는 하나의 진실을 보여 주지만 객관적 진리를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사진기에 찍힌 피사체는 '허구'일 뿐이다. '자폐적 사고공간', '허구적 세계'라고 재단하는 순간, 이미 보수주의는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탈냉전·지구화 맥락에서 보수주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전후체제'를 종식시키고자 '공식적 언설'과 '비공식적 언설'의 투쟁을 상징하고, '공식적 언설'을 단죄한다.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싸우는 보수'를 생각한다. 하지만 '공식적 언설'을 단죄하는 '싸우는 보수'는 이미 진정한 보수주의이기 어렵다. 여기서 "역사"는 본질상 경험이며, 역사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신뢰는 인간사에 있어 추상적·연역적인 사고에 우선하는 경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다<sup>77)</sup>는 기본 원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진보주의(근대주의)는 전후 일본의 현실을 규정했고 진보주의는 제도와 이념에 상당 부분 내재화되어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른 공동체적 요소와 더불어 이미 체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진보주의, 근대주의, 개인주의는 이미 퇴적된 경험을 구성하고 일본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사에키는 버크와 더불어 오크쇼트(Michael Oakeshott)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단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에의 적응이라는, 모든 인간에 부여된 활동을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것, 시도된 적이 없는 것보다는 시도된 것을, 신비보다는 사실을, 가능한 것보다도 현실의 것을, 무제한인 것보다도 한도가 있는 것

77) 니스벳, 『보수주의』, 45쪽.

을, 먼 것보다도 가까운 것을, 넘치는 것보다도 족할 정도의 것을, 완벽한 것보다도 귀중한 것을, 이상향에서의 지복보다도 현재의 웃음을 선호하는 것이다. 얻는 바가 더 많을 수도 있는 애정의 유혹보다는 기왕의 관계와 신의에 기초한 관계를 선호한다.……보수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 담담하게 있는 것, 자기의 몸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도 자신의 환경에도 존재하지 않는 한층 고도의 완벽함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sup>78)</sup> 보수주의의 장소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변화와 적응에 관한 이러한 원칙은 보수주의자이길 원한다면 포기될 리 없다. 전후체제도 이미 퇴적된 경험이며, 지구화와 국가의 국제생활도 이미 개인과 국가의 경험세계에 들어와 있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유연한 보수주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 이야기의 자기중심적 재구성을 통해 국가공동체 표상을 극단적으로 구현하려는 새역모의 정치적 표상작용은 협력-경쟁적/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 ‘허구적 세계’, ‘자폐적 사고공간’을 스스로 구축하는 보수주의의 극단적 표현인 것이 아닐까. 한때 새역모의 리더였던 니시오 간지는 기존의 ‘자기상실’의 역사서술을 비판하면서 “일본에서 본 세계사”와 “일본에서 본 세계사” 속에 제대로 일본을 위치짓는 일본사”에 기초한 역사관, “자기를 보편으로 간주하고”, “애매한 수동적 자세, 겸양,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역사관을 요구한다.<sup>79)</sup> ‘자기상실’을 극복하고 국가공동체를 재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허구’를 만들어 내는 새역모의 표상작용은 논리적 단순성과 역사적 허구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논리의 세계를 넘어 실천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정치적 행위의 경박성(imprudence)은 쉽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78) Michael Oakeshott, *Rationality in Politics*. 佐伯啓思, 『国家についての考察』, 24쪽에서 재인용.

79) 西尾幹二, 『国家と謝罪』, 90-93쪽, 97-98쪽.